

2021 서울 부산보물산개미디어감시연대 중간평가토론회

〈정책·검증은 사라지고 정치선택법만 난무,
유권자가 원하는 보도는?〉

인사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인사말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정책·공약은 사라지고, 소수정당 차별하고... 선거제도 이번에도 변하지 않았다

임동준 민주언론시민합 정책모니터 팀장

1.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도 중간분석 결과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 미디어감시연대는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5개 중앙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2개 경제일간지(매일경제, 한국경제),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보도를 분석했다.

현안 발생에 들쭉날쭉 선거보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보도는 현안 발생에 따라 주목도가 달라졌다. 각 당의 경선이 이뤄졌던 2월 4주차와 3월 1주차(2월 22일~3월 5일)에는 관련 보도가 305건이었지만 3월 2주차(3월 8~14일)에는 239건으로 줄어들었다. 3월 3주차(3월 15~21일)에는 326건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전체 보도의 약 9.1%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보궐선거보다 주목을 받은 현안이 있었다. 3월 2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등장한 후 관련 보도량이 급증했다. 3월 2일부터 10일간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보도가 406건이었던 반면, LH 투기 의혹 관련 보도는 975건으로 2배가 넘었다.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현안으로 인해 보궐선거에 대한 충분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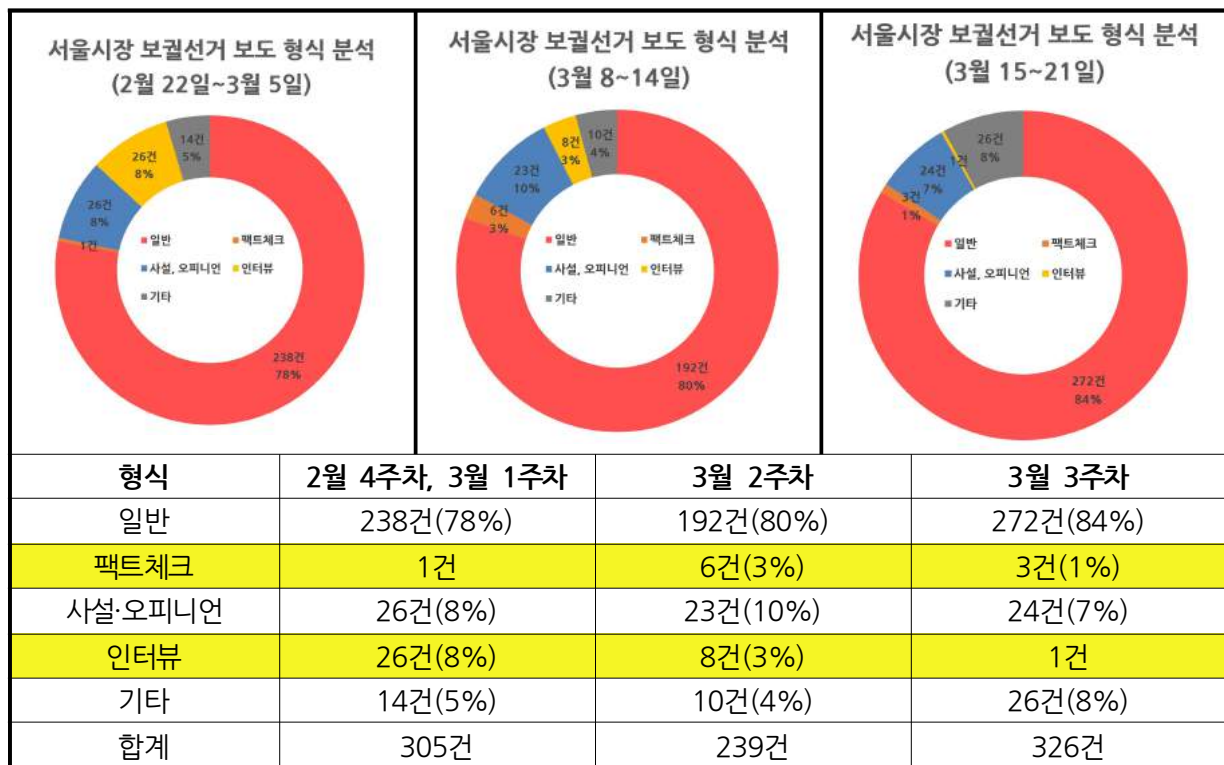
팩트체크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고 소수정당 인터뷰는 없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도의 형식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 3번의 분석에서 단순 사실 전달, 해석 기사가 포함된 '일반' 보도는 비중이 78~84% 수준을 유지하며 대

부분을 차지했다. 후보자와 관련된 행보, 논란 등을 그대로 전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후보자들의 허황된 발언과 공약 등은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팩트체크’ 보도가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3번의 분석에서 ‘팩트체크’ 보도는 10건에 그쳤다.

또한 언론이 후보자를 직접 검증하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인터뷰는 3번의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거대 양당의 후보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였다. 첫 분석이 있었던 2월 4주차, 3월 1주차에 진행된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경선후보 중심으로 이뤄졌다. 3월 2주차에는 소수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예비등록이 진행됐으나 한 차례의 인터뷰도 찾아볼 수 없었고, 3월 3주차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다룬 인터뷰 1건이 전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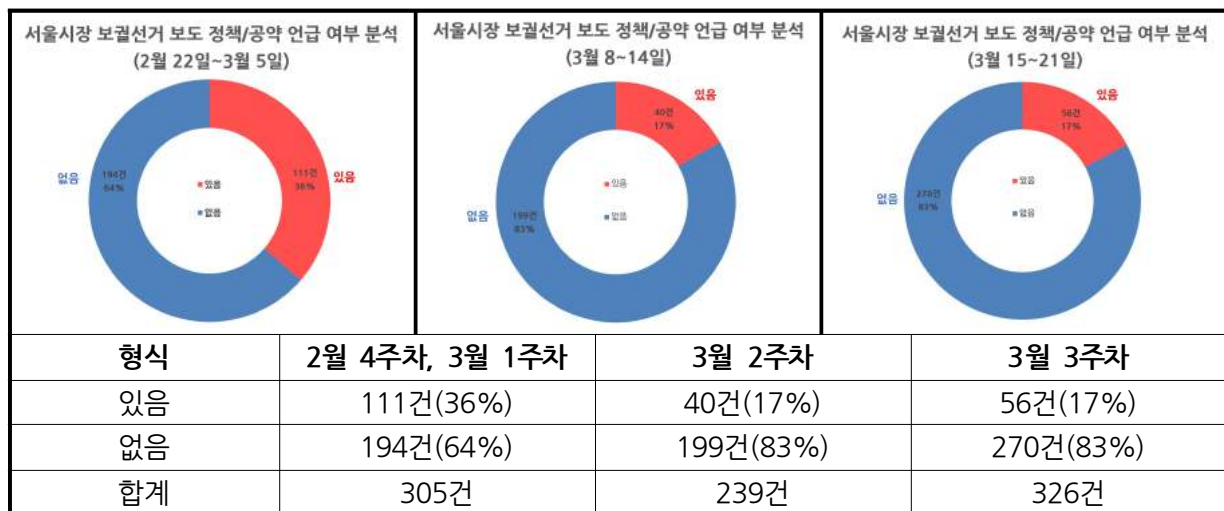
△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도 형식 분석(2/22~3/21)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 언급하는 보도 찾아보기 힘든 게 선거보도 현실

인물 중심의 선거를 벗어나 정책과 공약을 중심 의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다. 그러나 3번의 분석 결과는 언론이 정책공약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언론 소비자가 얼마나 자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접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보도가 정

책과 공약을 언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 수치는 선거가 가까워 오고 있음에도 늘어나지 않았다.

첫 분석이 있었던 2월 4주차, 3월 1주차에 36%를 기록했던 수치는 3월 2주차에 17%로 곤두박질 친 뒤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정책과 공약을 접할 확률이 채 30%도 되지 않는 셈이다. 인물 중심 선거가 반복되는 원인에 언론 보도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케 하는 수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도 정책/공약 언급 여부 분석(2/22~3/21)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 검증 보도는 사실상 사라졌다

후보자 정책을 검증한 보도는 훨씬 소수였다. 첫 분석에서 정책을 언급한 보도 중 검증을 진행한 보도의 비중은 22%였다. 대부분의 보도가 정책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친 것이다. 검증 보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3월 2주차에는 18%로 감소했고, 3월 3주차에는 11%까지 떨어졌다. 정책 언급 보도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검증 보도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1개 정책을 단순 언급하는 보도의 비중은 3번의 분석에서 계속 증가했다. 첫 분석에서 42%를 기록한 뒤 3월 2주차에는 53%로 절반을 넘었고, 3월 3주차에는 71%까지 치솟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당의 후보자가 결정되고,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순 전달만 한 보도양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분석 결과만 놓고 본다면 유권자는 언론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을 접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현실성이 있는 공약인지 등 검증결과를 언론으로부터 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처

럼 언론이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은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지 못함을 넘어 언론 신뢰도 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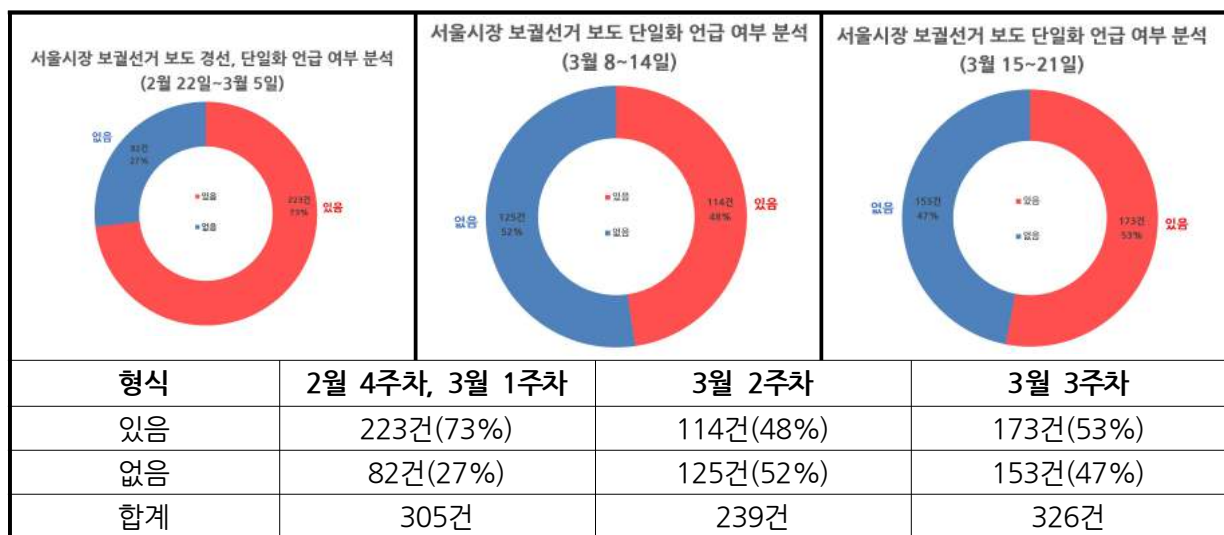
△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도 정책 언급 개수 및 검증 여부 분석(2/22~3/21)

©민주언론시민연합

거대양당 단일 후보 선출에 쏠린 언론의 관심

거대양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며 당선을 위해 단일 후보 선출을 모색했다. 언론은 정치권의 선거공학적 접근이 담겨있는 단일 후보 선출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거대양당의 후보 경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가 있었던 첫 분석에서는 관련 내용을 언급한 보도가 73%에 달했다. 한 주 뒤에는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관련 보도가 쏠려 단일화 관련 언급 비중이 48%로 감소했으나 거대양당의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 된 3월 3주차 분석에서는 다시 53%로 증가했다.

언론이 후보 단일화에 보인 관심은 정책 보도와 비교했을 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3번의 분석 모두 단일화를 언급한 보도가 정책을 언급한 보도의 2배 이상이었다. 유권자가 언론을 통해 정책을 접할 확률보다 단일화 관련 내용을 접할 확률이 2배는 더 높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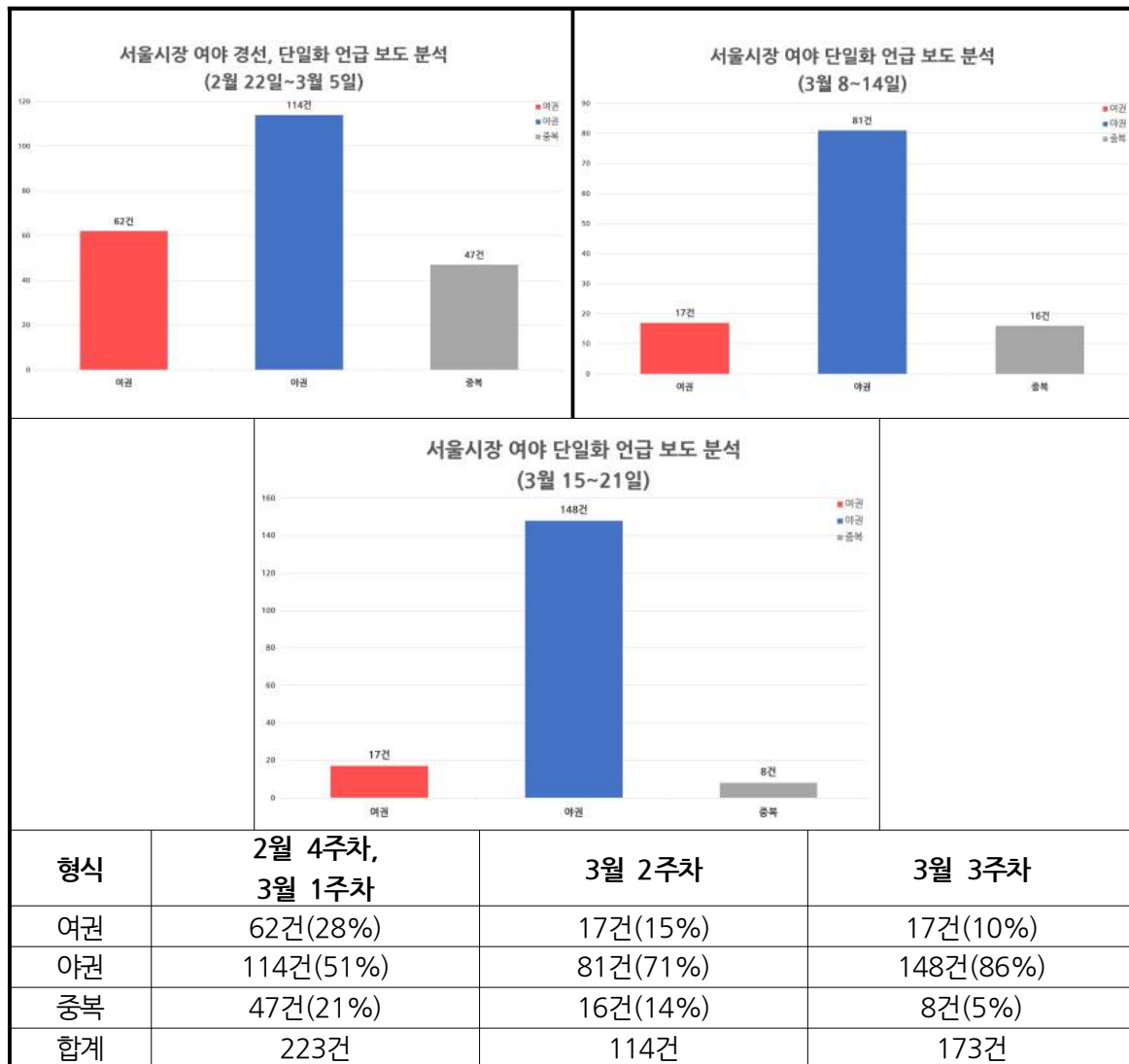
△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도 경선, 단일화 언급 여부 분석(2/22~3/21) ©민주언론시민연합

단일화 중에서도 국민의힘 중심 단일화에 치중

거대양당 중심의 단일화 중에서도 언론의 관심이 쏠린 진영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였다. 각 당의 후보 경선과 단일화가 같이 다뤄진 첫 분석에서 여권 경선 및 단일화는 28%였지만 3월 2주차 15%, 3월 3주차 10%로 점차 줄어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한 야권 경선 및 단일화는 첫 분석에서 51%, 3월 2주차 71%, 3월 3주차 86%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의 단일화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구도를 보이지 못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분석에서 정책과 공약 보다 2배 이상 많이 언급된 단일화가 특정 진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공정한 보도가 이뤄졌는지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도 경선, 단일화 언급 여부 진영별 분석(2/22~3/21) ©민주언론시민연합

2. 선거보도 필요한 역할하고 있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보도에서는 선거마다 반복되어 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등장했다.

선거공학 관점에서 단일화를 다루고, 이미지 선거를 유도하거나 후보자와 각 정당 대표 등의 혐오, 차별 발언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 보도들이다.

‘정책 단일화’는 요면하고 이미지 선거 부추기고

3차례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내용 중 핵심은 거대양당의 단일 후보 선출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 관심이었다. 그러나 단일화 과정에 대해 언론은 거대양당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대양당은 인물 중심의 단일화를 추진했고, 후보 단일화 이후에도 정책 단일화를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후보 경선과 단일화가 논의되던 시기 첫 분석결과에서 정책 단일화를 언급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박영선-김진애 단일화,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진행과정과 단일후보 선출 후에도 이를 묻는 보도는 없었다. 언론은 정치권의 인물중심 단일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을 뿐 실제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칠 정책 단일화는 무시한 것이다.

반면 이번에도 이미지 선거를 부추기는 보도가 등장했다. SBS <누가 웃을까...비대면 ‘민낯 유세’ 승부>(2월 28일 김수영 기자)는 거대 양당의 여러 예비후보가 벌인 유튜브 선거운동을 전달했다. 보도 내용은 “밤을 까는 모습”, “귀가 후 세수하고 난 모습” 등 자극히 이미지 선거를 유발했다. SBS는 “정책보다 친근한 면만 내세우는 ‘이미지 정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보도에서는 이미지 선거를 유발하는 영상을 여러차례 보여줬다. 이미지 선거를 비판하며 이미지 선거를 유발하는 아이러니였다.



△ 후보별 이미지 선거 전략 그대로 보여준 SBS <8뉴스>(2/28)

안철수, 김종인 혐오·차별 발언 제대로 비판 못하는 보도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소수자 혐오·차별 발언이 등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대표적이다. 안 후보는 금태섭 전 의원과의 단일화 토론에서 퀴어 문화축제를 두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샌프란시스코 퀴어축제는 외곽에서 진행된다고 “퀴어축제를 광화문에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발언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외치는 축제를 외곽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혐오발언이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퀴어축제는 대규모 인파가 도심에서 진행하는 축제라고 안 후보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그런데도 한국경제 <‘빅매치’ 대박 기대하는 오세훈·나경원…보수 눈길 사로잡은 안철수>(2월 21일 성상훈 기자)는 안 후보의 혐오 발언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며,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가 “국민의힘을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안 후보의 혐오 발언이 “민감한 주제”라더니 “중도표를 의식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의견”, “안 대표가 실속을 챙겼다는 분석”을 전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 중간제목은 “안철수 ‘성소수자’ 발언 화제”라고 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른 혐오·차별 발언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등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단일화를 진행 중이던 안 후보를 향해 “내가 보기에는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비방했다. 정치권에서 수차례 반복됐던 장애인 차별 표현을 상대당 후보 비방에 악용하는 사례였다.

하지만 선거공학에 빠진 언론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지 못했다. 매일경제 <“박영선 도교시장” “오세훈 도박하나” “안철수 정신이상”>(3월 18일 성승훈·박제완 기자)은 김 비대위원장의 차별 표현을 제목에 실었다. 본문에선 해당 표현을 두고 “강하게 공격했다”고만 썼을 뿐 차별 표현이란 점은 짚지 않았다. 채널A <여량야랑/단일화 주인공은?>(3월 18일 이동은 기자)도 “감정적 발언을 주고 받았다”거나 “두 사람의 설전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 게 전부였다.

그나마 MBC <정참시/이제는 ‘정신 이상자’ 왜 이런 막말까지?>(3월 18일 김재영 기자), JTBC <백브리핑/“정신이 좀 이상한…”>(3월 18일 김소현 기자)은 해당 표현에 대한 문제를 짚었으나 MBC의 경우 왕종명 앵커가 “듣기에도 민망해요”라고 발언하는데 그쳤고, JTBC도 김소현 기자가 “극한 발언”, “격한 표현”으로 언급하는데 머물렀다.

선거 시기에 등장하는 혐오·차별 표현은 언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언론이 후보자 등의 혐오·차별 표현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을 경우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 언론이 선거 공학에 몰두해 본분을 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검증보다는 공방·네거티브 부각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지난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 비위로 사퇴한 이후 1년간 공석이었던 부산시장 자리에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19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미래당 손상우, 민생당 배준현, 자유민주당 정규재, 진보당 노정현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로써 본격적인 4·7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보궐선거는 전국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라서 유권자의 관심이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그렇기에 후보자의 정책·공약, 자질 등을 충실히 검증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3월 셋째 주는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정책·공약 제안과 발표가 이어졌다. 지역언론이 검증할 정책과 의혹, 유권자에게 전달할 정보가 많았던 시기였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인물 검증에 나선 활동도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고, 후보자끼리 공방, 해명이 이어져 유권자의 궁금증은 커졌다.

이에 지역언론은 어떤 보도를 내어놓았을까.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과 정책 제안을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후보 등록을 마친 부산시장 후보 6명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에게 충실히 전달했는지 짚어보았다.

3월 3주 선거 보도 비중 신문은 감소 방송은 증가

3월 셋째 주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 건수는 총 109건으로 지난주 106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매체별 보도 건수 추이를 보면, 부산일보는 지난주 43건에서 이번 주 36건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방송 3사는 지난주보다 선거 보도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언론의 선거 보도 또한 본격화됐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이 기획보도를 선보였고, 이에 지난주 2건에 불과했던 기획/사실확인 보도가 이번 주엔 12건이었다.

국제신문의 '1대1 지상 맞대결'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기획으로 두 후보가 주요 이슈나 정책 등 상대의 약점을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이다. 기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총보도수	345(22)	355(21)	67(43)	57(32)	55(18)	879
선거보도	35(2)	36(1)	14(7)	15(8)	9(2)	109
비중	10.1%	10.1%	20.8%	26.3%%	16.3%	12.4%
지난 주 대비	-1.3%	-2.1%%	+6.9%	+10.4%	+5%	+0.1%

△ <표 1> 선거보도 건수, 신문 ()는 사진기사 건수, 방송 ()는 단신기사 건수

획의 형식 자체가 자칫 후보 간 소모적 논쟁, 공방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었던 탓에, 상대 후보의 물음에 ‘아는 바 없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회피성 답변으로 채워져 아쉬움이 남았다.

부산일보는 ‘유력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만을 대상으로 검증 시리즈를 마련했다. 후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재산 내역과 형성과정 등을 점검한 <박형준 부부 거주 엘시티 1채·기장 땅 1300평 등 재산 38억 추정>(3/16, 3면)은 박 후보 측 자료, 박 후보 측 설명, 박 후보 기자회견 등이 주요 기사 내용이었다. 특히 해당 기사는 이번 엘시티 의혹이 ‘묻지마 의혹’, ‘선거공작’이라는 박형준 후보의 주장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

두 신문사의 기획이 ‘후보’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KBS부산의 ‘공약검증K’는 후보들의 공약을 핵심 주제어로 분석해 후보 간 입장을 비교·검증하는 ‘공약’에 초점 맞춘 기획이었다. 선거는 다양한 지역 의제의 각축장이 되어야 하는 만큼, ‘유력 두 후보’의 주요 공약에 그치지 않고 군소정당 후보의 공약도 비교·검증 대상으로 다뤄주길 기대해 본다.

보도유형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도유형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스트레이트	24	29	53	리포트	5	7	7	19
의견/칼럼	3	2	5	단신	7	8	2	17
기획/사실확인	6	4	10	기획/사실확인	2	0	0	2
인터뷰	1(*기획)	0	1	인터뷰	0	0	0	0
기타	0	0	0	기타	0	0	0	0
포토뉴스	2	1	3					

△ <표 2> 기사 유형 (*중복집계 사유)

근거 있는 의혹 제기도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만 보고 후보 검증은 뒷전!

3월 둘째 주에 이어 셋째 주에도 박형준 후보와 관련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지역언론은 의혹을 충실히 전달하거나 검증하기보다는 여전히 거대 양당의 공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특히 입시비리, 불법사찰 관련 의혹은 시민이 후보에게 제기한 의혹임에도 정당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 중 하나로 틀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민의 의혹제기에 답하는 것은 유력후보자의 당연한 몫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부인 정도에 그친 후보의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정당 간 공방 때문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평가를 달았다.

일방적인 비난, 후보 일신에 대한 공격 등을 마타도어, 네거티브라 말한다. 하지만 타당한 근거가 있고, 무엇보다 시정 운영과 관련한 후보의 자질에 대한 의혹 제기나 질문이라면 이는 결코 인식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될 수 없다. 상대 정당과 시민, 시민사회의 의혹에 박 후보자는 충실한 답변으로 임해야 하고, 후보가 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혹1.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검증보다는 대리 해명에 급급했다

한 주간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언급한 지역언론의 기사는 32건이었다. 국제신문 7건, 부산일보 13건, KBS부산 4건, 부산MBC 4건, KNN 4건이었다. 이 중 26건이 더불어민주당·소속 정치인이 의혹을 제기하면 국민의힘·소속 정치인이 의혹에 대응하는 공방 보도였다. 그래서 각각 제기되는 의혹에 박형준 후보의 답변이 대응하는 기사 구조를 보였고 그 결과 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취재원은 20차례 등장한 ‘박형준 후보(선대위, 캠프, 측)’였다. 정치인이 아닌 취재원은 ‘공인중개사’가 유일했고 총 3차례 등장했다.

의혹 검증·해소를 표방한 기사는 2건이었다. 모두 부산일보의 기사로 선거 기획기사였다. 부산일보는 3월 18일 ‘4·7쟁점현미경’에서 박형준 후보 엘시티 소유를 다뤘다. 해당 기사는 ‘저층부인 탓에 인근 건물의 조망 간섭을 받아 로열층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탓에 마이너스 피까지 등장했다’라며 박형준 후보 측의 해명과 일치하는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인터뷰이는 모두 ‘한 공인중개사’, ‘또 다른 공인중개사’로 익명 처리했다.

하루 앞선 17일 노컷뉴스는 <엘시티 미분양이라 특혜 없었다?…“좋은 호실 미리 빼놔” 의혹 제기>(3/17)에서 “당시 미분양이라 특혜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안 좋은 호실만 남은 미분양”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매체	날짜	헤드라인	프레임	합계
부산일보	15일	엘시티 청약 당첨자를 ‘특혜’로 몬 민주당	공방	13건 (공방9 검증2 기타2)
	16일	박형준 부부 거주 엘시티 1채·기장 땅 1300평 등 재산 38억 추정	검증	
		법정 다툼으로 번진 박형준 네거티브 공방	공방	
		민주당, 박형준 흠집내기 올인… 엘시티 특혜분양·딸 입시비리 등 무차별 살포	공방	
	17일	연일 의혹 제기엔 고소·고발까지… 보선판 ‘엘시티 블랙홀’	공방	
	18일	부산 보선 D-20… 진흙탕 싸움에 정책은 파묻혔다	공방	
		엘시티 앞 회견 ‘박형준 때리기’…지도부 부산 총출동한 민주당	공방	
		“서울 아파트 소유 김영춘” 역공…판 뒤집기 나선 국민의힘	공방	
		부동산업계 “투기보다는 성공한 투자”… 박형준, 소유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	검증	
		[논설위원의 시선]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기타	
국제신문	15일	여당 “박형준 캠프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해당 인사 “허위사실…법적 대응”	공방	7건 (공방5 기타2)
		‘때리고보자’식 투기 공방 집중…신공항 등 정책 실종 우려	공방	
		여당, 박형준 겨냥 ‘닥치고 공격’…아직은 악발 안 먹혀	공방	
		박형준 “엘시티 두 채? 그 자체가 흑색선전”	공방	
	19일	부동산 성난 민심 “金 집값상승 책임” “朴 엘시티 거주 불편”	기타	
		부동산 공방 점입가경…여당 “박형준 집 대마도 뷰” 야당 “박영선 집은 일본 왕궁 뷰냐”	공방	
		[사설] <엘시티 특검, 부동산 전수조사 선거 뒤 호지부지 안 된다>	기타	
KB부산	15일	부동산 투기 의혹 공방 ‘과열’…정책 실종 우려	공방	4건 (공방4)
	16일	투기 의혹 공방…‘특별조사 기구’ 추진	공방	
	17일	“엘시티 특검해야” vs “LH 투기 검찰 수사해야”	공방	
	19일	엘시티 공방 격화…“재산 공개하라” vs “흑색선전”	공방	
부산MBC	15일	여야 폭로전 vs 고발..난타전 불붙었다	공방	4건 (공방4)
	17일	민주당 엘시티 총공세..박형준 "특혜 불법 없다"	공방	
	18일	김영춘-박형준 "고가아파트" vs "흑색선전만"	공방	
	19일	엘시티 구매 경위 논란 확산	공방	
KN	15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의혹’만 난무	공방	4건 (공방4)
	16일	시장후보 아파트 논란, 판단은 시민 몫	공방	
	19일	박형준 “아들한테 매입.. 불법 없었다”	공방	
	20일	후보 등록 첫 주말, 치열한 공방	공방	

△ <표 3>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관련 기사 목록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가장 많이 다룬 부산일보의 보도경향이 눈에 띄었다. 부산일보 사설 <부산시장 보선, ‘막가파식 진흙탕 싸움’으로 갈 건가>(3/18)는 “단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저렇게 격렬히 몰아붙이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비리로 얼룩진’, ‘난개발의 정점에 서 있는’ 엘시티의 상징적 의미를 ‘단지 고가 아파트’라 축소했다. 엘시티 특혜분양 비리 의혹은 향후 부산 시정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후보 자질에 대한 검증임에도 사안의 크기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다.

부산일보 <민주당, 박형준 흠집내기 올인…엘시티특혜분양·딸입시비리 등 무차별 살포>(3/16)는 입시비리에 대한 의혹 제기를 후보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이라 단정하고 ‘아님 말고 식’이라 특정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후보의 ‘부인’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해당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치해 이러한 의혹제기가 불리한 여론을 바꿔보기 위한 민주당의 선거전략이라는 측면을 부각했다.

국제신문 <여당, 박형준 겨냥 ‘닥치고 공격’…아직은 약발 안 먹혀>(3/17)는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를 민주당의 선거전략으로만 보고 있는 전형적인 기사였다. 특히나 의혹을 취재해 검증하는 주체로서의 언론이 아닌 두 정당 간의 공방 관망자로서의 위치를 취하고 있었다. 또 해당 기사는 ‘아직까지 민주당의 공세가 지역 민심에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라며 두 후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 근거라고 말했다.

與, 박형준 겨냥 ‘닥치고 공격’ ... 아직은 약발 안 먹혀

與,朴 소위 엘시티 공세 이어가 딸입시·사찰 연루 주장 입증 못해朴은 의혹 제기 관련자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겨냥해 연일 ‘닥치고 공격’을 펴고 있다. 이에 박 후보는 반박과 법적 대응으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이 박 후보 부인을 겨냥한 추가 의혹으로 판세를 흔들 ‘카운터’를 준비 중이라는 말이 파다한 가운데 박 후보 측

도 대응에 전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에도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박 후보에 대한 엘시티 공격을 이어갔다. 당 부산지역 장관경 토론회비지 조사 북위 신동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와 그의 딸이 엘시티 두 채를 소유한 데 대해 “2015년 국회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 후보의 재산은 13억5000만 원이다. 그런데 5년 만에 최소 20여 원을 추가하는 엘시티 코알층을, 가족 명의로 2채를 소유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주당의 공세가 지역 민심에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박 후보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각종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없이 ‘배와 찹쌀’ 의혹 제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는 전날 엘시티 소유에 대해 지난해 4월 프리미엄 1억 원을 포함해 21억 원에 분양권을 매입, 정상적 거래라고 반박했다. 당시 엘시티 북악층 시세는 24억~25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현재 시세(35억~45억 원)를 거론하며 투기로 몰아가는 것도 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기한 박 후보 딸의 총리대 입시 비리 의혹도 담보 상태다. 박 후보 측은 “딸이 총리대에 응시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는데,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다.

박 후보를 겨냥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도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박지현 국정원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KBS가 4시간 사찰 자료 일문을 ‘영와대 정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명시돼 있

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직접 요청한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장외대에 파견된 국정원 파견관이 자료 요청을 받으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 명확히 한 후에 보고서를 생산해 ‘진전’ 문서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영기 의원이 추가로 설명했다.

형우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은 여전히

○ 민주당이 제기하는 ‘박형준 의혹’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대응

민주당 주장	박형준 반박
엘시티 투기 의혹	“정상 매입”
딸 총리대 입시 비리 의혹	“출신대을 지원적 없다”
국정원 불법 사찰 연루	“사찰문건 본 악노 들은 적도 없다”
민주당 5.6건 추가 의혹 중비	의혹 제기 관련자 검찰 고발

△ 후보검증과 여론조사 격차 연결한 기사(국제신문, 3/17, 5면)

후보를 검증해야 하는 이유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함이지, 결코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여론조사를 반등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다. 후보에 대한 검증과 여론조사 결과를 연결한 위의 국제신문 기사는 정당의 논리에만 부합할 뿐이다. 또 무엇보다 여론조사 격차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 엘시티 의혹이 중요하지 않거나 검증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될 순

없다. 후보 검증 과정은 여론조사 결과와는 별개의 영역이다. 후보검증과 여론조사 결과를 연결해 ‘약발 안 먹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 검증은 불필요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박 후보 측의 입장에 기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민주당의 마타도어, 네거티브 전략 혹은 스모킹건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의혹제기라 평가하던 지역언론의 보도는 18일 SBS <“박형준 부인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 보도 이후 엘시티 특검을 언급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KBS부산은 SBS 보도 이후에도 <엘시티 공방 격화…“재산 공개하라”vs“흑색선전”>(3/19) 이라고 보도해 공방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혹2. 박형준 후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부산시 기자회견 열어도 지역언론 관심 없었다

박형준 후보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17일 박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소식만을 단독으로 전한 지역언론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제신문 <김영춘·박형준 우호세력 ‘외곽 지원전’ 치열>(3/18, 5면)은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는 가운데 우호 세력의 외곽지원전도 후끈 달아올랐다”며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의 기자회견도 이 중 하나로 언급했다. 유력후보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였음에도 해당 의혹 자체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둔 기사구성이었다.

부산MBC도 <민주당 엘시티 총공세…박형준 “불법 없다”>(3/17)에서 “한편 박형준 후보 딸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홍익대 김승연 전 교수는 해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라는 한 줄로 의혹을 언급했다. KNN <정책 실종 선거판에 엘시티 공방만>(3/17)은 같은 날 있었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김승연 전 교수의 기자회견을 함께 전하며 ‘온종일 파상공세가 이어졌다’고 정리했다.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김승연 전 교수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박형준 후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주체가 정당 소속이 아님에도 ‘외곽지원’, ‘민주당 엘시티 총공세’ 중 하나로 소개했고, 익명의 취재원이 아니기에 인터뷰를 하거나 추가 취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보인 언론은 없었다.

의혹3.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유권자가 제기한 의제 지역언론은 왜 안 다루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6일 부산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날 4대 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 등 시민·환경단체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고발했다. 같은 날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면 범죄자고, 사찰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박형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형준 후보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부산시민사회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이에 주목해 해당 사안만을 기사로 내거나 기자회견 외에 적극적인 취재에 나선 지역언론은 없었다. 무엇보다 시민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 지면과 뉴스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유권자 의지 소홀하게 다뤘다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기간이라 정책 실종, 진흙탕 공방을 우려하는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정작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이나 후보로부터 받은 질의서 결과는 주목하지 않아 지역언론의 정책 실종 평가가 무색했다.

지난 16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탈핵정책 요구안 및 탈핵에 대한 각 후보자 입장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식은 KNN과 부산일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기사 모두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부산일보는 <탈핵도시 입장 밝혀라>(3/17)라는 제목의 사진기사로만 소식을 전했는데, 탈핵도시에 대한 후보 입장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KNN은 <탈핵정책 ‘김영춘 조건부 수용·박형준 반대’>(3.16)라 단신으로 전했지만 출마 후보자들의 입장을 간략하게라도 언급해 적어도 유권자가 탈핵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도왔다.

부산항미군세군실험실폐쇄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부산시장 당선 시 미군 세군실험실 찬반 주민투표 즉각 개최”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그 결과를 17일에 발표했다. 이 소식은 부산MBC <미군 세군실험실 폐쇄, 후보들에게 물었더니...>(3/21)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 후보로부터 받은 질의서 결과 전달한 기사 (좌)KNN, 3/16, (우)부산MBC, 3/21

이외에도 부산인권정책포럼의 10대 과제 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시장 후보에 제안하는 정책,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15대 시민의제 등을 보도하기도 했지만, 유권자 의제를 후보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답변에 재질문하는 등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충분치 않다 근소정당 후보의 공약도 조망하라

19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었으나 18일 6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후보등록을 마쳤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19일 1면에 해당 소식을 배치했다. 국제신문은 1면 <총성 올렸다…김영춘·박형준 등 6명 본격 레이스>에서 김영춘과 박형준 두 후보의 사진만을 실었고, 출마의 변을 전하는 단락에서도 김 후보와 박 후보만 등장했다. 두 후보 외 후보들은 5면 사진기사 <부산 보선 우리도 된다>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부산일보 <김영춘 “검증된 일꾼” 박형준 “문 정권 심판”… 부산시장 보선 막 올라>는 6명 후보의 사진을 모두 실었고, 출마의 변도 한 줄씩 모두 실었다.

부산MBC는 18일 첫 소식으로 <부산시장 후보…김영춘, 박형준 등 6명 등록>을 배치해 6명의 후보 모두를 균형감 있게 전달했다. KBS부산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6명 등록 마쳐>를 8번째 단신 소식으로 전했으며 KNN은 18일 <부동산 비리 여야 공동조사, 잘 될까?> 리포팅 끝에 “한편 6명 후보가 모두 등록을 마쳤다.”라는 멘트와 함께 후보 이름은 생략한 채 화면으로만 노출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모니터 기간	2021년 3월 15일(월)~3월 21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모니터 대상	‘선거’를 한 번이라도 언급한 기사이거나 후보, 지지율, 공약, 유세 등의 단어를 언급해 4·7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의 함정 ‘단순하게, 받아쓰도록’

이준영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

1. 모니터링 개요

2021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새롭게 시도한 '포털 뉴스 모니터링'은 포털 뉴스의 '배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포털에서의 언론사 기사 조회수는 네이버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AiRS)에 의한 이용자 개인별 <MY뉴스> 내 기사 배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포털 뉴스 모니터링'은 네이버 뉴스 내 '많이 본 기사'를 분석하여 선거 국면에서 알고리즘이 어떤 기사를 추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기사 추출 방법, 분석 유목 등을 설정하여 이번주까지 3번의 모니터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 기사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서비스 채널 제휴 언론사 중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언론사를 선별하고 랭킹 뉴스 내 언론사 별 많이 본 기사를 해당일 다음 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상위 5개 추출(crawling)하여 그 중 서울 시장 선거 관련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된 기사만을 다시 걸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기사 분석 유목은 다음과 같다

기사 주제 : 후보 간 비방, 여론조사, 후보 공약 등(최대 3개까지 분류)
 관점 제시 양태 : 완전히 단일한가, 대체로 단일한가, 복합적인가.
 기사의 심층성 : 이벤트 보도 기사인가, 기획 기사인가, 설명 기사인가.
 인용된 미디어 : 타사보도, 라디오, SNS, 토론회, 유튜브 영상 등.
 실명 취재원 : 개인, 단체, 자료 실명 취재원이 각 몇 명인가.
 익명 취재원은 몇 명인가.
 이해 당사자 수는 몇 명인가.
 직접 인용 : 후보자, 엘리트, 시민이 각 몇 명인가.

2. 모니터링 중간 평가

3월 둘째 주에는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 힘의 시장 후보가 되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했으며,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이슈가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간 단일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러한 이슈들과 맞물려 3월 둘째 주에 높은 조회수(10만 이상)를 기록한 기사들의 절반 이상이 여론조사 결과를 담고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되지 않은 기사들도 정치권의 회의 중 발언 혹은 정치인의 페이스북 발언들을 별다른 분석 없이 실어 날랐다.

3월 둘째 주 전체 기사들을 분석 유목에 따라 살펴보면, 주제에 관해서는 '여론조사'와 '후보 간 이합집산'을 다룬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책 기사의 수는 앞 기사들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부동산 정책'에 편중됐다. 해설 기사와 기획 기사의 수도 적었다. 전체 26건의 기사 중 6건에 그쳤다. 나머지 기사들은 여론조사 결과 요약, 인터뷰 인용, SNS(페이스북 등) 인용으로 작성된 이벤트 기사에 해당했다. 기사에 인용된 미디어로는 SNS가 가장 많았고, 시민 취재원을 '직접 인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3월 셋째 주 선거 국면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뉴스 소재는 오세훈·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이슈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 그리고 3월 17일에 있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기자회견과 그에 이어진 박영선 후보 캠프 인사들(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의 사퇴였다. 오세훈·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이슈도 협상과 불발, 재협상이 이어지며 한 주 내내 여러 뉴스의 소재가 되었다. 3월 셋째 주에도 둘째 주의 흐름이 이어졌다.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한 기사들 뿐만 아니라 타사의 여론조사를 단순 인용한 보도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하나 '많이 본 뉴스'의 특징은 제목에 자극적인 표현들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3월 20일자 <이해찬 “與 선거 거의 이긴 듯 LH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어”> 기사, 이데일리의 3월 17일자 <안철수 "이준석, 잘리겠네"..李 "文대통령 아들 사건 잊었나"> 기사, 경향신문의 3월 20일자 <악재 또 악재, 흔들리는 박영선 반전카드 있나> 기사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의 이긴 듯, 잘리겠네, 악재 또 악재'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많이 본 뉴스'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은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받아쓰되, 그 중 독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표현들을 기사 제목으로 가공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져 있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분석 유목과 관련해 보았을 때도 3월 둘째 주의 경향이 반복됐다. 총 80건의 기사 중 거의 절반 가량인 37건의 기사가 “이합집산”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었다. 박영선 후보 캠프 구성원들

의 “캠프 사퇴”가 주제인 경우가 11건, “후보 간 비방”과 “여론조사”가 각 5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투기 관련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 공약”이 주제가 된 경우는 3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공약과 관련된 분석, 기획 보도는 한 건에 그쳤다. 기사 심층성에 관련해서는, 둘째 주와 마찬가지로 ‘이벤트’와 관련된 기사의 강세가 이어졌다. 전체 80건의 기사 중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선거 관련 이벤트를 단순 보도하는 기사들이 63건이었다. 해설기사가 8건, 기획기사는 9건에 그쳤다. 해설, 기획기사들도 ‘선거 판세에 관한’ 해설, 기획기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직접 인용에 관해서도, 후보자를 비롯한 사회 엘리트를 인용한 경우에 비해, ‘시민’이 직접 인용의 대상이 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3월 넷째 주에는 다음과 같은 선거 국면의 이슈들이 있었다. 3월 21일(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최종 타결돼 22일(월) 하루 동안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3일(화)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 서울시장 단독 후보로 선출되었다.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패배한 안철수 후보는 곧바로 오세훈 캠프에 합류해 오 후보 지지에 나섰으며, 25일(목)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3월 넷째 주에 눈에 띈 것은 후보 및 정치권 인사들의 SNS 글 내용을 인용한 보도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많이 본 뉴스’는 3월 26일(금) 중앙일보의 <허경영 또 등장 “지지율 3위 날 왜 빠나, 토론 초청장 보내라”>로 허경영 후보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전달하면서 토론회 초청 조건을 단순 설명하는 기사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는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인용한 3월 25일(목) 중앙일보의 <전여옥 “철수씨, 오세훈 찍어서 미안해요…이유는 딱 하나”>였다.

3월 넷째 주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앞선 두 주와 같은 ‘후보 간 이합집산’이었다. 총 144건의 기사 중 32건의 기사가 후보 간 이합집산을 주제로 삼았으며, 여론조사 결과가 19건, 선거에 대한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담은 기사가 17건, 25일(목) 시작된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보도한 기사가 16건이었다.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이 주제가 된 기사는 114건 중 2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3월 25일(목) 매일경제의 기사 <[단독인터뷰] 오세훈 “당선되면 취임 일주일내 상계동·목동 안전진단 착수”>가 26일에도 많이 본 뉴스 랭킹에 올라 두 번 집계되어, 사실상 3월 넷째 주 동안 후보 공약을 다룬 기사는 오직 한 건이었다. 오세훈 후보 인터뷰를 보도한 매일경제 기사의 경우 오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이 내용의 주를 이루었으며, 각 후보 공약을 비교 분석한 기사는 아니었다.

3월 넷째 주 역시 둘째 주, 셋째 주와 마찬가지로 단순 ‘이벤트’를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가 주를 이뤘다. 총 144건의 기사 중 정치권 인사의 SNS, 선거 유세 장면, 여론조사 결과 등의 이벤트를 기술하는 기사가 기획, 해설기사보다 10배 많은 120건을 차지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 관련 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획 기사와 해설 기사는 각각 12건으로 여전히 현저하게 부족함을 볼 수 있다. 12건의 기획기사 중 3월 21일(월) 미디어오늘의 <서울·부산 시장 선거 앞두고 꼭 읽어야 할 기사>는 여론조사를 분석해 실제 민심에 가장 근접한 여론조사 값을 추출하는 홈페이지(MBC '여론조사를 팩트체크하다'), 예비후보들에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보내고 답변을 토대로 설계해 유권자의 성향에 맞는 후보를 찾아주는 홈페이지(국제신문 '생각 닮은 꼴 찾기')를 소개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취합했다. 3월 25일(목) 데일리안의 <[4·7 재보선] "우리도 있소" 서울시장·부산시장 외 이곳도 불꽃>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려져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전국의 재보선 현황을 알려주는 등 독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두 기사의 조회수는 8,344회, 75,766회에 그쳤다.

3. 시사점

3주간 네이버 '많이 본 뉴스'의 선거 보도 경향을 분석한 결과, 정치권의 발언과 후보 간 이합집산을 단순하게 보도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분석적이고 기획성 있는 기사들을 찾기는 어려웠다. 시민의 목소리가 인용되거나 의제화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여론조사'의 형태로만 시민이 선거 국면에 등장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심화됐다. 분석 유목을 통해 보자면, 1주차에는 기획·분석 기사를 제외한 이벤트 관련 기사가 전체의 68.8%였다면 2주차에는 78.8%, 3주차에는 83.3%가 되면서 그 비중이 늘어났다. 선거 가까워져 오면서 기사의 절대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기사나 심층적 기사는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관점 제시 양상도 점차 단순화 경향이 심해졌다. 1주차에는 완전히 단일관점이 61.2%, 2주차는 38.8%로 복합적 관점(41.2%)의 비중이 늘어나는 듯 보였으나, 3주차에는 다시 완전히 단일 관점이 64.6%가 되었다.

알고리즘은 단지 독자들의 기사 수용 행태를 '반영'하는 역할을 넘어 독자들에게 특정한 형태의 선거 기사를 읽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알고리즘은 정책을 분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제화하는 기사들을 배치해, 합리적 공론장을 형성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선 분석을 통해 네이버 '많이 본 뉴스'의 알고리즘이 '새로운 시각과 참신한 분석을 제공하는 기사'들 보다는 '단순한, 받아쓰기식' 기사들을 배열, 추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

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기사들이 추천되어 어떤 선거가 만들어지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론

김회영 국제신문 사회1부 기자(공정정보위원회 간사)

토론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

장아영 YTN 공정방송추진위원장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

